

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0. 4.

발 의 자 : 김정재 · 권명호 · 노용호  
박대출 · 박정하 · 이 용  
이주환 · 이철규 · 정운천  
한무경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고, 재난 예방으로는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어 이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.

또한,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·유통업 및 소상공인·중소기업 시설은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관련 시설 밀집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·임업·어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·

유통업 및 소상공인·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,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조, 제60조 및 제66조 등).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한다.

1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·유통업 및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시설

2.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

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”를 “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주거용 건축물”을 “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(기계실·전기실·변전실·발전실·공기조화실·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

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생계안정”을 “일상회복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8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產業)”을 “농업·임업·어업·염생산업(鹽生產業)·유통업 및 소상공인·중소기업 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, 승강기,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

7의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
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6조의2제1항 중 “지급할 수 있다”를 “지급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.

제2조(피해규모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

년 8월 28일 발생한 제11호 태풍 ‘힌남노’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
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 ① ~ ③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한다.</u> <u>1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產業)·유통업및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시설</u> <u>2.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</u>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①·② (생략)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<u>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</u>	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③ ----- ----- <u>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</u>

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(생략)
2.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

<신설>

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.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과 및 그 부속시설(기계실·전기실·변전실·발전실·공기조화실·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)-----

3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, 승강기,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

3. 4. (생 략)

5.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

6. (생 략)

<신 설>

7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
8. 9. (생 략)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

지원

4.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6. -----일상회복-----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7의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
8. -----농업·임업·어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·유통업 및 소상공인·중소기업 시설-----

9. 10. (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

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<후단 신설>

⑤ ~ ⑦ (생략)

제66조의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(이하 “복구비등”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66조의2 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지

급하여야 한다.

<삭제>
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